

• 2000년대 동아시아 정세 시나리오 •

# • 일본과 중국의 경쟁 •

## 아시아·태평양 시대 도래

'태평양 시대'는 이미 찾아 왔다. 태평양지역 국가가 경제력에 있어서 별씨 대서양 지역을 능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아태경제권의 위상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이라고 하면 93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참가국으로 범위를 한정지어도 큰 무리는 없다. 日本, 아시아 신흥공업국(ANICS), ASEAN, 中國, 美國,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들은 1992년 세계인구의 41%, 세계총면적의 34%를 차지한다. 인구나 면적 비중보다 경제적 비중은 더욱 높다. 91년도 APEC의 GNP는 세계전체의 55%, 92년 세계교역비중은 40%에 이르고 있다. 특히 92년도 역내교역 비중은 70%에 이른다. 아태지역의 대미교역량은 3천억 달러를 초과, 美國 전체교역량의 40% 이상을 점유하여, 美國 서유럽간의 교역량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축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은 지역 10년간 47.3%의 높은 경제성장을을 실현하였다.

## 미래학·이미 아태중심을 예측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홍망」에서 역사상 과거의 강대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강대국의 쇠퇴는

국가의 힘을 경제력 확충보다 군사력 확대에 경주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준의 강대국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동시에 약해져 그 위치는 흔들린다고 분석되었다. 중세의 로마가 그러하였고, 현재 美國의 쇠퇴에도 그 내면에는 이러한 요인이 내재해 있다.

군사력이 강대국의 표상이었던 과거에도 그리하건만, 지금과 같은 경제중심주의 시대에서는 군사력에 힘을 쏟는 국가의 쇠퇴는 명약관화하다. 소련이 붕괴한 것도 경제지상주의라는 세계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소련이 변화를 시도하였을 때는 이미 빠져 나올수 없는 수렁속에 빠져 있고 난 후였다. 앞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태평양 시대 도래를 예상한 사람은 의외로 많다. 일찌기 역사 연구의 저자 아놀드 토인비도 그 중의 한명이다. 세계역사의 주역은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태평양 시대에 주역이 될 국가는 어디인가? 동남아 국가도 아니며, 통일한국도 아니다. 이미 세계강국이 되어 있는 日本과 21세기 세계 최대 경제력을 가질 中國중의 하나일 것이다.

## 21세기 中國과 日本의 경쟁

日本과 中國이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양국간에는 보이지 않은 마찰이 계속하

여 발생할 것이다. 세계가 경제이기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마찰은 이미 나타나 있다. EC통합, 北美자유무역협정 등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등도 경제이기주의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강대국간에 끊임 없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21세기에는 그 주체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될 것이다.

中國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이에 따른 정치적 위상도 강화되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美國이 中國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200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작업에서 북경개최를 반대하였으며, 결국 당초 유력하였던 북경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였다. 최소한 중국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중국인들은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약화와 분열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台灣에 F-16기 등 무기를 수출하며 中國의 인권침해 상황을 구실로 올림픽 선정 방해 뿐만 아니라 관세혜택 제공 조차 꺼리고 있는 것도 中國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다.

현재 中國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美國과 日本등 선진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中國경제가 발전하고, 기술력을 축적하고 난 21세기에는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中國은 국내시장만 하여도 큰 시장이다. 현재는 구매력이 부족하여 中國만의 시장으로는 협소하고, 자본이 부족하여 소리를 다소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홍콩, 대만, 동남아 국가들과 中國 시장만 하여도 충분할지도 모른다. 자본도 해외화교에 의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최근 中國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80%가 해외화교 자본이다.

## 中國의 민족주의 현실화 가능성

中國에는 이미 민족주의 정조가 나타나고 있다. 등소평을 비롯한 현재의 중국지도층은 중국식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실제 대부분 중국인들의 의식주에는 큰 여려움이 없다. 공산주의 원산국이라는 구소련이 실패한 경제개혁을 무난히 수행하여, 이제는 구소련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中國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오고 있다. 중국인은 자본주의의 우수한 면들과 전통적인 유교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혼합하여 새로운 中國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광동성을 비롯한 남부의 기업가들은 해외화교들을 통해 현대식 기술과 자본을 끌여들여, ‘대중국’을 형성하는 주역으로 자처하고 있다. 순문과 中國 근대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광동성에서 행군을 시작하였듯이 오늘날 광동인은 스스로를 현대중국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한결음 더 나아가 많은 중국인들은 日本과의 경쟁에 나서는 남부지역 사람들을 애국자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비록 中國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본질은 많이 변형되어 있다. 中國지도부는 가능한 오랫동안 일당독재로 中國을 꾸려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당 독재를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다. 韓國이나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목표로 개발독재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이 논리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中國에도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21세기 초반 늦어도 중반이 될 것이다.

더우기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신념과 충성을 유도할 정도로 대중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없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중국인의 성향을 미루어 보건데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도방식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통합하고 당의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가 효과적인 수단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무언가 상대적이고 가상적인 적이 필요하다. 이 가상적의 대상은 日本이 될 가능성이 높다.

## 日本의 군사대국화 여지

日本도 이미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정치와 외교분야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 캄보디아에 평화유지활동군(PKO) 파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이사국 퍼센노력 등 그리고 이들 모두를 제도화하기 위한 2차대전이후 만들어진 헌법의 개정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소카와 신정권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수상감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등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의 선봉이 되고 있다.

그들은 日本이 세계 신질서형성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日本의 역할이라는 것이 묘연하다. 지금 주장하는 역할과 2000년에 가서 주장할 역할이라는 것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은 여전이 변하면 아주 절묘하게 적응하고 말을 미화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中國과 日本의 마찰

이같은 日本의 아심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中國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美國의 日本시장 개방요구는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日本은 그 방패막이로 中國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석유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日本은 2차대전 패배의 원인중의 하나가 석유자원 확보의 실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만주사변도 日本이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도 큰 목적이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치유신때부터 일본은 흑룡강, 요녕성 등 中國의 동북지방에 석유를 비롯한 많은 자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이것들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日本은 언제나 석유자원의 확보에 어느나라 못지 않은 애착을 보여왔다. 日本은 中東이나 인도네시아의 석유자원 개발 그리고 운송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보다 신경을 쓴다. 이같은 맥락에서 향후 중국 천진 앞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안 대륙붕이나, 대만앞 대륙붕으로 유전지대인 파랑도도 화약고중의 하나이다.

이미 中國과 日本은 미래를 대비한 소리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을 둘러싼 경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 日本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차관과 직접투자로, 中國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中東의 유전지역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말라카 해협에서 日本은 유조선 통과시 환경기준 강화에 앞서고 있다. 거기엔 환경기준에 부합된 이중선체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中國을 견제하는 데 숨은 의도가 있다.

이에 맞서 中國은 미얀마와의 무역·교통 연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가 뱅골만으로의 직항로를 허용하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의 원조계획의 하나로 해군기지 확충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日本, 中國 경계론 대두

21세기에는 아시아에서 중국계와 비중국계간의 민족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국가간 경계개념이 희박해지고, 대신 민족간 단합과 대립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中國은 1차적으로는 홍콩과 대만을 묶어 하나의 국가형태와 비슷하게 발전시키며, 2차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美國과 日本과의 경제대립 구조 출현에 대비할 것이다.

이같은 발언들은 93년말부터 日本에서 나타나고 있는 中國경제론의 표현이다. 중국에 대한 경계론은 日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美國이 북경 올림픽 개최권이나 핵 문제를 둘러싸고 中國을 견제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 OECD, 세계은행이 中國경제의 전망을 하나같이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선진국들의 입장에 의한 중국경제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日本에서는 일반인이 보는 잡지에도 이러한 심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유명 경제잡지인 포브스 지의 일본판은 94년 신년특집호에도 그러한 일본인들의 관심과 심기가 나타나 있다. 「아시아의 세계, 대동아 경제권을 이끄는 것은 일본 경제인가, 화인경제인가」라는 특집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은 짐작이 간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저서와 일본내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신파로 의원도 이 잡지에서 미국 경제론이 아니라 中國 경제론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中國경제의 발전을 전제로 日本과 中國경제의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中國의 발전이 日本에게 새로운 기회도 되지만 위협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본인들은 中國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일본인 지식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여 왔듯이, 최소한 사전에 위기론을 조성하여 준비의 필요성을 일반에게 알리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하다는 추측이 같다. 다시 말하면 日本의 상총부에서는 이같은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같은 日本과 中國의 보이지 않은 경쟁 준비에 대한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별로 가능성 있게 보이지 않은 아태지역에서 중재자 역할론만 내세우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듈다.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1994. 2월호〉